

저축銀 수사 칼날에 '숨죽인 여의도'

공성진 의원·임종석 전의원 등 금품수수 후폭풍 강타

추가 연루설 확산속 政·檢 '중수부 폐지' 싸고 정면충돌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면서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이 신상길(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의 추가 연루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찰이 "수사 방해"라며 강력 반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5일 여야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서로 과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무차별적 폭로전 양상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차기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하지만 검찰이 중수부 폐지 등에 따라 감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확실한 혐의 없이 여론몰이로 불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권력 실세들의 연루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저축은행 로비 문제를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던 민주당은 임종석 전 의원의 연루설이 터지자 내심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추가로 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소속 의

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점검에 나서는 한편,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아권 인사를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권력 실세들의 개인 의혹을 몰 타기 하고 초점을 흐리기 위해 아권 인사들의 이름을 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전·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저축은행 비리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볼 때, 여야 모두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상처를 더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위 소위 '중수부 폐지 범제화' 합의... 政·檢 충돌

검찰 "저축은행 수사 하지 말라는 거냐" 여야 "무소불위 권력 몽니 부리지 말라"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전격 합의하자 검찰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지난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범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현행 검찰청법의 직제 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양자택일하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또 검찰의 압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지난 3일 박영선 대검 차장 주재로 감사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을 정조준하자 수사 방해 차원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밤 9시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참고인을 돌려보내고 4~5일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

검찰은 또 6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

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대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중수부 폐지에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이를 대검 규칙으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으로 할지의 선택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며 "사법개혁위 위원들도 동의한 일이라 앞으로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수부 폐지 합의가 마음에 안든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비리에 정치인 연루설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안이 나와 국민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혹시 호남 정치인 연루?

부산저축銀 대주주 광주·전남 출신에 의혹 시선

당사자들 "문제없다"해명 불구 지역 정가 어수선

저축은행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일가가 광주·전남지역 출신인데다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였다는 등 각종 '설(說)'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조금이라도 연루될 경우, 차기 총선 공천에서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저축은행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구속기소된 신상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박지연 전 원내대표는 지역구에 있는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한 사람도 모르고 제 지역구에 있는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공세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의 저축은행 사태 연루 무모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으며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관련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1대 주주로 참여한 신안 조순타운 부지 조성 과정 등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 시절 일부 핵심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최대 주주 등 핵심 인사 상당수가 광주이고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에선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거론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광주이고 출신의 조영택 의원은 "광주이고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부산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설의 배경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의도가 숨어있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좌관이 1억 받아 임종석 "책임 통감"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은 4일 신상길(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3년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저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K씨)이 관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정을 거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전 보좌관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1억8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 연루설이 돌아 '혹시 문제될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 (K씨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며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K씨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 명예회장이) 로비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2009년이라는데, 나는 그때 총선에서 떨어져 미국에 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로비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서 있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ww.vdental.co.kr

VITAL LO는 변혁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 합금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바이탈로

믿을 수 있는 기업

VITAL LO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치아 기능 상실의 고통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업 VITAL LO입니다.

VITAL LO는 경영효율화(무영업사원, 무지점망, 생산라인 자동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본사직판)을 통해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합리적인 판매방법을 개발하여 실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발명가적 개척정신으로 치과용 합금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만들고 있는 VITAL LO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선택이 바뀌면 원가가 내려갑니다!

5월 특판(한시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판문의전화 : 062-225-2275

VITAL LO
Dental Gold Alloy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6호

전화 : 062-225-2275 / 팩스 : 062-226-2275